

〈제8회 ‘과학기술, 리더십을 만나다’〉

과학기술계,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hanmail.net



인간과 예술, 사회, 종교, 고령화 사회, 여성, 미디어를 만난 과학기술이 이번에는 리더십을 만났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지난 11월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과학기술 리더십을 만나다’란 주제로 8번째 ‘새로 보는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고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과학기술 정책 마인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지속적 경제성장’ 여건 조성에 가장 적합해야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란 제하의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계를 포함, 한국 전체를 새롭게 끌어갈 리더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전 총장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크게 두 가지 경제운용 패러다임, 다시 말해 IMF 구제금융 이전의 국가 주도형 패러다임과 IMF 이후 지금까지의 단기 수익 중심 시장주의 패러다임을 경험해왔다”고 말했다. 먼저 “1960년대 이후의 국가주도형 패러다임은 ‘한국주식회사(Korea, Inc.)’, 즉 정부-금융-대기업 집단의 삼각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금융 부문을 통해 대기업 집단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주고, 투자로 인한 위험 부담은 전 국민이 나누어 짊어지게 하는 이 같은 경제운용 방식은 경제발전 초기 일자리 창출과 위험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총장은 “그러나 한국 경제는 양적 성장과 글로벌화로 인해 이 시스템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주식회사형 시스템은) 커져 버린 경제의 자원배분을 담당하기에 비효율적이었으며, 투명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음으로써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일시에 몰락시키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몰고 왔다는 것이다. “IMF 이후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인 시장중심주의, 정확히 말해 단기수익 중심의 경제운용 방식도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금융이 각각 투자계획과 용자심사를 너무 ‘신중하게’ 하는 나머지 한국 경제가 축소 지향적으로 변모했고, 경제의 양극화로 계층 간의 대립이 격화됐으며, 이 양극화는 사회통합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으면서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시장과 자유경쟁, 그리고 인센티브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공정한 룰과 심판의 중요성은 그만큼 강조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았다.

정 전 총장은 “시장에서 경쟁을 중시하려면 동시에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재기할 기회를 주는 데 인색치 말아야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사회적 안전망도 잘 갖춰놓아야 시장이 바르게 작동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안전망은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기조강연에 나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믿고 따르는 기준, 규칙이나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와 같은 사회 공동의 무형 자산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대집단은 물론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해서조차도 신뢰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IMF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국가주도형 패러다임이 한계를 맞이해 IMF 사태가 일어났고, 시장중심주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국가와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앞으로 나라를 책임질 리더는 첫째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큰 그림과 비전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둘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전문성, 창의력 등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품성과 능력을 지니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개혁을 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격적 소양이 부족한 지도자는 다양한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한국의 새 리더는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인간적 품성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 창의성의 인적 자본을 갖춘과 아울러,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운용 시스템을 정립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제도 개혁 선행돼야 과기분야 리더십 현실화

경희대 국제학부 정하용 교수는 아세톤을 발명한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카임 바이츠만, 화학자로 출발해 변호사, 정치가로 성공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공학을 전공한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 그리고 현 국가주석 후진타오 등 이공계 교육을 받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 현실에서 과학기술계 출신 정치 지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1천200여 명의 등록 후보 중 이공계 출신은 25명, 양대 정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3명, 한나라당의 경우는 2명에 불과했으며,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20명의 위원 중 의대를 제외한 과학기술계 출신 위원



은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의원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IT를 포함, 이공계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 인구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공계 출신 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즉각적인 정책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4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건 총선 공약을 조사한 결과 큰 항목에서 과학기술이나 IT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선거전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국회에서 과학기술계가 과소 대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선거제도’에서 찾았다. “각국이 선택하고 있는 제도들을 보면 앵글로색슨 계통의 국가들은 양당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구 선거제도(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유럽 대륙 국가들은 대체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지역구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이공계 정치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상원의 경우 전문직 정치인의 비율이 62%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0.5%를 법률직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 출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노동계나 농업 출신 역시 각각 0.7%, 5%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하원의 경우는 전문 정치인 비율이 6.1%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엔지니어 출신 의원이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출신 의원 비율은 13.8%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 정치는 미국 정치와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지만 과학기술 분야 지식인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로막는 점에 있어서는 정치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수 투표제에 의한 지역대표제와 대통령제, 법대를 비롯한 인문계 선호의 전통, 이공계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국회 진출이 극소수에 불과한 점 등은 거의 미국과 흡사하다”며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정치적 리더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공계에 비우호적인 교육·인력정책 등이 걸림돌

강태진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한국에서 과학기술을 전공한 사람이 사회적 리더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 원인에 대해 “사회적 리더 양성과 거리가 먼 이공계 교육”, 그리고 이공계에 비우호적인 교육, 인력정책 등을 꼽았다.

“학생들이 철저하게 이과인과 문과인으로 길러지다 보니, 이과 전공자들은 체질적으로 사회 문제를 등한시하고, 문과 전공자들은 과학기술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유 영역마저 갖지 못함으로써 서로를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나아가서는 고착화된 상하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는 이과, 문과 학문을 넘나들 수 있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를 육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학장은 이 같은 이과, 문과 영역의 구분은 결과적으로 “할 말은 많은데 말을 할 줄 모르는, 또 말을 할 줄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기형적인 졸업생을 배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할 말도 많고, 또한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글로벌 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며 “수학에 재능 있는 학생이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철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제로 대표되는 공과대학 교육의 변화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못 갖추고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 초급 기술자를 거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기술 경영자 등으로 성장하려 할 때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며 공대 교육과정을 “전공에 대한 기초 배양과 더불어 경제, 법률 등 사회와 산업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개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실천 능력을 집합적 체계모니터화해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진단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집단적 이해관계 등에 있어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능력, 과학적 태도를 가진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냉철함이 수반되지 않은 지도자의 열정은 망상으로, 불굴의 의지는 독단으로, 추진력은 공동체의 재앙으로 현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는 과학적 태도를 갖고 문제 상황이나 부당한 비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증해가며 보다 설득력 있는 자세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겸허함과 탐구정신이 요구된다”며 과학기술계를 통해 사회 전체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 육성될 수 있기를 요망했다.

미래 지도자는 ‘커맨더’ 아닌 ‘코디네이터’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는 “미래 과학기술계 지도자는 과학적 사고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 문제 등 심각한 사안들을 다른 정치가들과 협력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 즉 ‘창의성’을 무한 존중할 수 있는 과학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형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래 지도자는 커맨더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종합해 결합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터일 뿐”이라고 리더십을 정의했다.

김진형 KAIST 전산과 교수는 전 미국 앨 고어 부통령의 사례를 들어 “과학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뛰어난 과학적 소양을 가진 앨 고어 같은 인물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했다.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인 가운데 앨 고어처럼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한다”며 “과학기술인 가운데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 KAIST 졸업생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㉔



포럼에 참석한 발표자들